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교육지 2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금지! 위험의 외주화

2020년 4월 20일(월) | www.nodong.org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02-2670-9136 

외주화로 계속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



2020년 2월 노동부가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2018년 기준) 11곳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포스코 제철소(포항·광양), 한국철도공사, 현대제철 등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산재사망의 94%(17명 중 16명)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2017년 주요 업종별 30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 95%가 하청 노동자였는데, 그 이후로도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청년비정규노동자 김용균 사망 1년을 맞아,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발전 5사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95.7%가 하청 노동자였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20명은 100%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1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 95%(158명 중 150명)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해마다 심각합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원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이달 9일 부산 사하구 하수도 공사장의 4미터 깊이 맨홀에서 일하던 하청 이주노동자 3명이 고농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발주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부산시로 작업 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상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재해였습니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일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은 이마저도 꼼수로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표 사례가 앞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도급금지 작업인 도급작업을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계약축타직 채용이라는 꼼수로 법령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재벌 대기업의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런 행태를 감시, 관리해야 할 노동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꿈수로 개정 산안법 무력화 시키는 재벌 대기업

정부는 경총과 전경련의 민원창구?

경총과 자본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내용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경총과 자본의 요구를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하기보단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 불릴 만큼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과 투쟁이 큰 계기였습니다. 2018년 12월 말 산안법 개정 투쟁은 두 번째, 세 번째 김용균, 구의역 김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중요 조항인 도급금지과 더불어 산재사망 기업 하한형 처벌 등이 경총, 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도급금지 범위는 협소해졌고 하한형 처벌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산안법을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후퇴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원청 책임을 강화한 건설 기계는 27개 직종이 아닌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 4개만 적용했고,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범위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안법과 하위법령 후퇴와

하거나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노동부에게 외주화 금지 관련,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도급금지 작업 범위 확대,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 책임 확대 등 7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인권위 뒤 5개월간 누장을 부리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지켜보겠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도급금지가 축소된 개정 산안법과 어떠한 이행 계획도 없는 중장기 검토를 답변으로 내놓은 노동부의 답변은 경총과 자본 눈치만 보다가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코로나 19와 규제완화가 무슨 상관인가?

2월 하순부터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는 특수고용, 학교비정규직, 방과후 교사 등 법과 제도 외곽에 놓인 노동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과 전경련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큰 폭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총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폭 축

외주화와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몰리는 노동자

소, 일반해고제 도입 등 40개 법안을 개악하자 합니다. 전경련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탄력근로제도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9일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경총과 자본이 숙원사업처럼 요구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확대, 정기검사 유예, 년 1톤 미만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를 정부가 허용합니다. 도대체 화학물질 안전규제 완화가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출활력제고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것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는 규제완화를 끌어들이는 경총과 전경련, 자본의 행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는 아프면 쉴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이스 손해보험 구로 콜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216명 중 94명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입니다. 게다가 콜센터 노동자의 감염이 가족에게 이어졌고 투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처럼 ‘아파도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였다면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아픈 노동자의 출근을 강요하는 구조를 만든 곳은 원청인 에이스 손해보험입니다. 즉, 콜센터 집단감염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원청인 에이스 손해보험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원청은 현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0만 노동자가 일하는 다른 콜센터 노동 현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콜센터 사업주들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거나 책상 사이에 칸막이 하나 설치로 방역 조치를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사업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방문 감독 대상은 1만 여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더 면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은 전화 점검으로 끝내거나, 협회가 자율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 코로나19 감염의 근본 원인은 외주화였습니다.

책임을 외면하는 원청, 이를 묵인하는 노동부가 있는 한 외주화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계속 부를 것이 자명합니다. 원청의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외주화해 버리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자

2020년은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

건법이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생명 안전을 강조하며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임기의 절반을 도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일터에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현재 17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언론보도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하는 중대재해 자료로만 파악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춘 듯한 재난 상황 와중에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매일 죽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사망재해 주요 원인인 유해 위험 작업이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 법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꼼수를 막을 정부 의지가 없는 현재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낼 수 없습니다. 김용균이 사망한 컨베이어벨트 작업, 구의역 김군이 사망한 스크린 도어 작업, 수많은 죽음을 부르는 조선하청 등 위험 작업도 도급금지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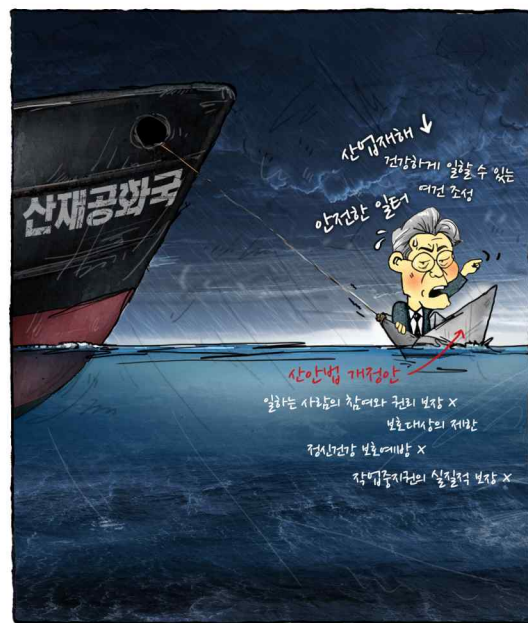
노동부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력화하는 재벌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도급금지 범위 확대, 위험의 외주화 제한, 직접 고용 확대 등 7가지 권고 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물론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공통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나 ‘중대재해기업을 처벌’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확보

한 의석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때 더 이상 여당의 핑계를 댈 수 없는 의석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내 강조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 안전 사회 성과를 내야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도록 압박하는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이윤은 얻고 책임은 회피하는 재벌 대기업과 자본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외주화 금지를 위해 거침없고 중단없이 투쟁하겠습니다.

그걸로는 못간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